

해외낙농소식



조석진
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이탈리아의 유제품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이탈리아는 유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의무화를 도입하였다. 이번에 이탈리아가 도입한 시험적인 이 규정은, 우유성분을 포함하는 유제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함을 의미한다.

이탈리아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유럽위원회(EC)로부터 어떤 반대의견도 없었고, 이탈리아 내 대부분의 농업관련 산업조직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9년 3월 말까지 시험적으로 시행된다고 정부관계자가 언급하였다. 이 새로운 규정은 (양, 당나귀, 물소, 산양젖 등) 모든 형태의 동물 젖과 유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음식 중 치즈를 함유한 피자 혹은 밀크 초콜릿 등은 이 새로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나 가공유, 요구르트 등은 새로운 규정의 적용대상이다. 새로운 규정은 식품회사들로 하여금 제품 라벨의 교체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규정공포

후 90일 후에 시행되며,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180일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소비자인증

식품제조업자는 치즈, 버터,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생산에 사용된 식품원료의 가공 및 포장을 한 나라가 어디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탈리아정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결과,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원산지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산지명칭보호제도(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혹은 지리적표시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이탈리아의 경우 49개의 치즈제품이 대상임)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은 원산지표시제도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 유럽연합(EU)의 다른 회원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금후 EU 차원에서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면제된다. 2016년 7월 이탈리아정부는 원산지표시제와 관련하여 유럽위원회(EC)와 접촉했으며, 그 때 이탈리아의 원산지표시제가 한 달 먼저 프랑스에서 승인된 원산지표시제도와 유사함을 알게 되었다.

산업차원의 부담

그러나 로마의 Hylobates 컨설팅회사 책임자인 Luca Bucchini 박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원산지표시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희망적인 것은 유럽위원회(EC)가 회원국별로 상이한 제도에 중지부를 찍기 위해 신속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 경우 프랑스와 달리 우유자급이 안 되는 이탈리아의 경우 부담이 더 클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새로운 규정이 산업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식품업계는 원산지표시제가 이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자신들의 제품홍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더욱이 새로운 규정의 시행에 있어서는 단순히 ‘EU산’이라는 표기를 넘어 더욱 상세한 원산지표기가 필요하다.”고 Bucchini씨는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제품라벨을 바꾸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의 우유생산이 감소하는 시기에 공

급처를 다른 나라로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했다. 이는 무역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라벨교체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직접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규정의 의도는 좋으나, 짧은 라벨교체기간을 감안할 때 반드시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제품표기

한 제품이 한 나라 안에서 원료공급, 가공 및 포장 등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는 원산지표기는 매우 간단하다. 우유를 예로 들면, ‘우유의 원산지: 이탈리아,’ 혹은 ‘크림: 사용된 우유의 원산지는 이탈리아와 같은 식의 표기이다. 그러나 가공과 포장 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우유원산지: EU 회원국/혹은 비EU 회원국’과 같은 식이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제품라벨상의 원산지표기는 지울 수 없고, 잘 드러나며, 읽기 쉽도록 표기해야 하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알아보기 어렵게 숨기거나, 흐릿하게 표기하거나,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없도록 다른 어떤 문구나 그림 등으로 소비자의 표기인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탈리아 외에 핀란드, 그리스, 리투아니아와 포르투갈도 유사한 원산지표기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

출처: DAIRYreporter.com(by Jim Cornell, 2017, 1,25)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TPP 폐기에 대한 미국 낙농업계의 경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 폐기를 위한 행정명령에 정식으로 서명하자 미국낙농가연합(NMPF) 및 미 유제품수출협회(USDEC)의 지도자들은 그 같은 결정이 미국의 낙농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의 낙농산업은 생산량의 15%, 즉 1주일 간 생산량 중 약 하루 분을 수출하고 있는 셈이다. 2015년의 경우 유제품수출액은 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생산, 가공 및 관련 산업분야에 총 1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미 유제품수출협회(USDEC)의 책임자 Matt McKnight 씨가 말했다.

한태평양동반자협정(TPP)은 오바마행정부기 태평양연안의 주요 낙농국인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등 12개국을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다. TPP 협정은 공산품과 유제품을 포함하는 농산물의 단일

시장을 출범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아직 12개 참여국이 모두 비준을 하지 않은 관계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미국의 노동단체들은, TPP가 발효되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보다 임금이 싼 개도국에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TPP는 미국으로부터 일자리를 빼앗아 가게 되므로, 미국경제에 있어서는 “잠재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TPP 협상은 TPP에 참여하는 개도국들에게 최저 임금 및 안전한 노동조건 등 국제노동법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미 낙농단체들


트럼프에게 무역협정보호를 촉구

TPP 하에서 미국낙농은 유제품수출확대 및 수출유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통해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전국낙농가연합(NMPF) 및 미 유제품수출협회(USDEC)에 의하면, 멕시코는 미국산 유제품의 최대수출국으로, 2016년의 수출액이 총 12억 달러에 달한다.



전국낙농가연합(NMPF)과 미 유제품수출협회(USDEC)를 포함한 미국의 낙농관련 단체들은, TPP가 미국과 멕시코 간의 농산물무역을 보호할 뿐 아니라 성장이 예상되는 아시아시장에 대한 미국낙농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TPP에서 탈퇴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TPP가 당장은 별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아시아 및 전 세계에 대한 미국산 유제품의 수출확대 가능성을 감안할 것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쟁국들이 지난 수년 동안 성공적인 무역협상을 해왔음을 상기시켰다. 그 같은 의미에서 미국도 스스로 주도권을 가

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미국농업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국낙농가연합(NMPF) 회장 겸 CEO인 Jim Mulhern씨가 말했다.

TPP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성 외에 위생검역(SPS) 및 지리적표시제(GI)의 남용 등을 포함하는 무역장벽과 관련하여 중대한 진전을 보았다는 점에서 미국 낙농산업에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McKnight 씨가 말했다. 

출처: DAIRYreporter.com(by Mary Ellen Shoup, 2017. 1.23)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